

◆ 政府 施策 ◆

국내외 退役기술자 300명 확보 계획

－ 通産部, 중소기업 기술·경영지도 －

통산산업부는 기계류, 전기·전자 등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약 300명의 국내외 퇴역기술자를 확보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박사급 우수두뇌로서 군입대 대신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역기술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로 상반기중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기술자로 구성되나 일부는 일본 해외무역개발협회(JODC)에 등록된 기술자와 일본 北九州지역 기업체의 퇴역기술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간 3천명 정도가 산업체에 배정되고 있고 이중 약 13%만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배치되고 있으나 이를 3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과학기술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中企부설연구소 가운데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이 3명 이상 있는 연구소에만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토록 하는 규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두뇌 배정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석사학위 소지자 1명과 학사급 2명 이상만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96년도 團體隨契 289품목 지정 - 通産部, 中企간 경쟁물품 71개 품목 -

통상산업부는 금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작년보다 25개 줄어든 289개를,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으로 71개를 각각 지정했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충전장치등 4개품목과 추천기준 미달 및 동일 세 번째 통폐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24개품목 등 28개 물품이 제외됐다.

그러나 3개 물품이 신규지정돼 전체적으로 25개 물품이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의 경우 전력공급장치 등 6개 물품을 제외하고 충전장치·계장제어반 등 6개 물품을 신규지정해 물품수에서는 변동이 없다.

통산부는 이번 물품지정과 관련,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업종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한편 자금수급의 애로가 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제품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KS, ISO 9000, 단체표준 등 품질향상 노력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업체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6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전기공업 분야)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5930-095	31201109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 가스 개폐기에 한함)
5975-021	28114109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6110-011	31203101	배전반(전기조절장비)
6110-014	31203109	
6110-022	31109109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6110-063	31109109	무정전전원장치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6110-070 6120-010 6120-013	31102101 31102109	변압기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1,000kW이하에 한하며, 해상 용 및 방음형은 제외)
6130-039	31109102	정류기, 부동용

■ '96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전기공업 분야)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5925-022	31201109	차단기, 누전
6110-011	31203101	배전반(154KV, 345KV용 보호 배전반에 한함)
6110-025	31201309	계장제어반(수처리설비에 한하며, 수요처발주 예산액이 '96. 1. 1~6. 30까지는 25억원이하. '96. 7. 1~12. 31까지는 20억원이하에 한함)
6120-001	31102104	리액터(분로용 제외)
6130-027	31109100	충전장치(충전기)

'96년도 資本財 표준화 사업계획 수립

- 工振廳, 정부우선구매·자금등 지원 -

공업진흥청은 올해 자동차와이퍼모터 등 모두 50개 과제에 대한 자본재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된 표준규격들에 대해서는 KS 또는 단체규격으로 제정하고 정부 우선구매제도 등과 연계시켜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자본재산업의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본재표준화 사업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공진청은 이 사업계획에서 올해가 자본재표준화 5개년계획의 원년임을 감안, 표준화 추진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성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과제 중 50%는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간 부품공용화 과제를 우선개발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될 표준규격들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해 관리된다.

특히 규격제품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조달 물품이거나 사용자보호와 안전관련 품목들은 KS규격으로 개발해 정부 우선구매제도와 연계,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체표준은 대기업과 생산자단체를 통해 표준품이 우선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작품 제작, 금형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공용화 완료업체에 대해서는 여타제품의 개발과 자동화·정보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토록 하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자본재표준화사업을 과제별로 보면 우선 기술이 안정되고 수급상 계열관계가 있는 부품·소재에 대한 규격의 통일·단순화를 통해 타기업군간 혹은 경쟁업체간 규격의 공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이퍼모터 등 25개 과제를 공용화과제로 개발기로 했다.

또 수출촉진 품목과 국제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풀림방지너트 등 15개 과제를 해외 선진규격과 부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어백 등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소재·부품 중 국제 도는 국내규격이 없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10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사업과 병행해 새로운 표준규격으로 개발·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표준화과제를 수행할 기관은 2월 29일까지 한국산업표준원에 표준개발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표준화 과제별 추진목표, 내용, 수행방법 및 그 능력을 검토해 표준화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개발기관을 확정한다.

■ '96 표준화 대상과제

분 야	과 제 명	기능 및 용도	비 고
전기기기 (6개)	특고압컷아웃 스위치	주상변압기 1차측에 부착하여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를 위한 스위치	공용화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	전열기기의 발열체	"
	변압기의 소음레벨 시험방법	변압기의 소음레벨의 기준 및 시험방법	부합화
	건식변압기	발전소, 변전소 및 건물내에 설치하는 25.8KV 3MVA이하의 변압기	"
	전동공구(드릴, 톱, 드라이버 등)	수지식의 전기드릴, 전기톱, 전기드라이버 등의 전기식 공구류	"
	전력용 피뢰기	써지 및 낙뢰에 대한 보호기기	공용화

'96年度 調達규모 9조5500억원 확정

— 조달협정非加入國업체 國內進入 배제 —

조달청은 올해 정부조달 및 비축규모를 작년보다 7% 증가한 9조55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률을 3~5% 가량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97년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업체 보호에 힘쓰고 환경을 감안한 조달사업을 추진하며 조달체계의 정보화에 주력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조달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자구매·외자구매·시설공사계약·주요물자 비축 등 사업별 구매 및 비축규모를 95년의 8조9321억원보다 7% 증가한 9조5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업별로는 시설공사계약이 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내자구매와 주요물자 비축을 위해서는 각각 3조9천억원과 2천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6970억원의 실적을 보였던 외자구매는 올해 65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차관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특히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를 위해 물자구매·시설공사 계약·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모두 8조8천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률도 중소기업체는 51%에서 56%로, 지방업체는 39%에서 4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적격 심사시 中企를 우대하며 지역생산품에 대한 지청구 매도 작년보다 5개 늘어난 40개 품목으로 늘리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비축품목을 20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늘리고 방출시 인수기간도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사업을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체제 완비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조달사업 △조달사업의 정보화 등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영문요약공고·통계보고서 작성 등 개방시 의무이행 사항을 상반기중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亞·太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조달제도 및 조달정보 공개제도를 조사해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적용, 조달협정 비가입국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배제하고 D&B 등 해외의 우수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 외국 부실업체의 참여를 억제하며 공급체계 및 AS 시스템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조건 등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규모를 작년보다 60억원 늘어난 450억원으로 책정하고 비축사업도 재활용 원자재 등을 대상으로 작년의 3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조달관련 기관 및 업체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자자료교환(EDI) 및 전자우편제(E-Mail)의 도입을 추진,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勞使協力 우수업체 금융·세제 등 優待

— 不要不急의무고용인력 축소 —

정부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협력 모범업체에 대해 金融, 稅制 및 褒賞 등에서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노무관리진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인상 교섭시에 賃金總額기준을 쓰도록 권장하고 공공부문의 유급전임제를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연수생 도입을 늘리는 한편 불요불급한 의무고용인력은 축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6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갈등과 대립의 10년'을 마무리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올해 기본목표로 정하고 △노사관계 정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산업인력의 경쟁력 향상 △고용보험제 조기 정착 △산업사회의 안전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시책의 내실화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추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무관리매뉴얼을 제정하고 노무관리전문가 풀(Pool)제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협력 모범업체에 대해 금융, 세제 및 포상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汎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임금교섭의 기준을 임금총액으로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연대파업, 제3자 개입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제노동재단(가칭) 설립을 통해 勞·使·政 협력에 의한 노동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연수생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기관과 약정을 맺어 외국인훈련생을 특별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훈련생 특별도입은 중간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훈련수당을 집중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후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人力公團의 역할을 훈련관리에서 훈련지원 위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현장기술혁신을 주도할 다기능기술자 양성수를 지난해 3천명에서 올해는 4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 실업급여와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중 실업급여 지급액이 9만9천여명에 130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